

도내 정당·후보 선거 체제 본격 가동

선거대책본부 출범 준비 작업 등 분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각 정당과 후보들이 총선 승리를 위한 기선전기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오는 28일에 도당 선거대책본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선거대책본부를 현 당직 그대로인 원톱·위주 진용을 갖추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경우 새누리당 전북도당 김형수 위원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조

직을 정비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감독'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말 선거대책본부를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당 역시 경선 발표를 20일 마무리한 이후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31일 선거대책본부를 출범할 계획이다.

선대본부장은 현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춘진 의원과 최규성 의원이 공동본부장으로 의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31일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선거대책본부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3당 중 가장 먼저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도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공천권이 확정된 후보들과 협의, 도당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 맞춰 선거 캠프별 선거대책본부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에 도당은 경선이 마무리되어야 할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이후 선대위 발표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오는 24일부터 25일이 본 후보 등록기간 이전인 23일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선거대책본부장이 '단독'이 될지 또는 '공동'이 될지도 내주 초반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도당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경선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선대위 발족과 관련해서는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경선이 종결되는 내주 초반 선대위를 구성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도당이 선대본부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편 각 정당 후보들은 오는 24·2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4·13 제20대 총선 후보자 등록하고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고민형기자

4.13 선거 RUN·RUN·RUN

엄윤상 예비후보, "어르신 노후 편안하게"

국민의당 엄윤상 예비후보(전주시을·사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르신과 함께하는 100세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가 편안한 전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엄 예비후보는 "가칭 '어르신 쉼터' 활성화위원회를 구성, 실질적인 쉼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물적, 심리적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예산확보에 나서는 한편 관련 입법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니어클럽과 인생 이모작센터도 설치해 노년화 사회에 발맞춘 교육 기회를 제공,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며 "공공근로와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어르신들에게 아들 같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르신 소풍창구를 개설하고 수시로 접수되는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시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영수 기자

국민의당 김종인 셀프 비례 "국민 우습게 보는 것"

국민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비례대표 2번에 지명된 것과 관련,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김정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대표가 스스로 비례 상위 순번인 2번을 지명한 것은 염치없는 '셀프 비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어느 정당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사실상 1번인 비례 2번을 당대표가 차지한 적은 없다"며 "당의 전권을 접수해 칼바람을 일으킨 것이 고작 셀프 비례 2번을 위한 것이라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야를 떠나서 비례 대표란 5년째라니 기네스북에 추천할 만한 일"이라며 "더구나 김 대표는 국보위 전력이 뇌물수수 전력이 있어 더민주를 상징하는 비례 2번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성주기자

국민의당 공천 경선 둘러싸고 진통 '심각'

배제된 예비후보들 반발...공정한 여론조사 요구 등

국민의당이 공천 경선을 둘러싸고 진통이 심각하다.

경선에서 배제된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함께 후보들간 공정한 여론조사 자세 요구 등 갈등 불씨를 지피고 있다.

조형철 후보는 지난 18일 불합리한 경선 후보 선정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지난달 2일 국민의당 전주에 예비후보 등록했다.

현재 전주에는 장세환 한영규, 김호서, 조형철, 엄윤상 등 5명의 예비후보가 경쟁 중이다. 국민의당은 4인 이상인 지역은 자격심사를 거쳐 4인만이 경선에 나간다. 4인 이하는 자격심사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모두 경선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조 후보는 "지난 14일 오

후 8시에 중앙당으로부터 경선일정에 맞춰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15일 조형철 후보와 모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만 이뤄졌고 그에 따라 경선에서 배제됐다. 왜 5인 중 2인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는 이어 "2인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여부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모 후보에게는 공지 했다고 한다. 이점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14일 경선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한 점을 보면 경선후보로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포함 됐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석연찮은 후보 선정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경선 후보 재선정에 따른 시간상 제약이 있다면 완전배심원제 등을

통한 공정한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전주시당은 김광수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대처 문자를 놓고 내용을 겪고 있다. 강동호 이관승 이기동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중인 지난 18일 김 후보측에서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언급하며 부재 중 전화가 있는 사람들의 연락을 차단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면서 "여론조사기관을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 것은 명백한 공정경선 위배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보자 경선은 공정한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 세후보자는 중앙당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김 후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사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광영기자

김호서 예비후보, "국민을 위한 정치 하겠다"

국민의당 김호서 예비후보(전주시을·사진)는 19일 "여·야 할 것없이 민생경제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당선이 되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는 '정부 출범 3년 정책 모음집' 발간을 통해 국민들을 속여무인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고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 막판과 욕설을 비롯, 패거리 정치의 전형 '살생부리는 문건이 난무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의 노골적 한풀이와 재가 정치로 민생은 뒤로한 채 경쟁과 뺏치를 달기 위한 자위대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전북을 출대한 새누리당, 30년 표를 물려주었는데도 전복을 지키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전복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정영수 기자

정동영 예비후보, 스포츠컴플렉스 건립 추진 약속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는 "전주에 종합 스포츠컴플렉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지난 18일 전라북도 체육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건립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전라북도 체육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인구가 13만인 김천이나 27만인 강릉에도 있는 스포츠컴플렉스가 인구 65만의 전주에 없다는 것은 지역차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강한 전북 정치판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어 "스포츠컴플렉스를 추진하면 현재 담보 상태에 있는 종합경기장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중앙선관위, 내일부터 거소투표 신고·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20일 신세장에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거소투표를 위해 오는 22~28일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병입·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입·요양

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한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와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성주 기자

이한수 예비후보, 경선 결과에 대해 감사인사

이한수 국회의원예비후보(이하 이 후보)는 지난 18일 오후10시 국민경선을 통해 경선확정후보로 본선 출전이 가능해졌다.



이한수 예비후보는 "여러분이 보내 주신 애정과 사랑은 익산시를 더욱 발전 시키려는 명령으로 알고 지칠 줄 모르는 땀을 뿌리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부름이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증명해 내고 환황해권 시대의 배후 도시로서 역동감 넘치던 희망의 익산을 되찾을 때까지 저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선에서 패배한 "세분의 후보님께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시 모든 분들의 뜻까지 겸허히 제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정권환출을 위해 저부터 한일 밀일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시장 재입시절 터득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곳곳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기에 감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조배숙 예비후보, 익산을지역 공천확정

지난 15일, 16일 이틀간 실시된 국민의 당 익산을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선에서 조배숙 예비후보(이하 조 후보)가 친선만고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다.

조 후보는 "이 모든 것이 익산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 덕분"이며 "익산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지난 4년간의 인고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던 시민 여러분의 마음과, 손길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4.13 총선에서 반듯이 승리하여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민주화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호남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4년간 정체인 익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얼마 남지 않은 본선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이석권 예비후보 구도심 자영업자 정책 공약

무소속 익산을 이석권 국회의원예비후보(이하 이 후보)는 "지난 17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나랏살림 기본에 충실 하겠다는 원칙을 외치면서 구체적인 4개의 실천 사항 중 '구도심 자영업자'정책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4가지 정책(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차보호, 특별법, 생계형 창업자 6개월 자치 보호규약, 소상공인 호민관 제도, 구상권 재생 지원법)을 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이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획된 상권의 특성에 맞는 각종 문화와 예술 역사가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특성에 맞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매력요소를 갖게 하였고, 또 진정한 구도심 소상공인의 재생에 기여 할 수 있다"며 "구 상권 재생 지원법의 내용은 ▲특화거리 재생 거버넌스체계 지원 ▲특화거리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지원 등의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유성엽 예비후보, 지방분권 개헌 공약

제20대 총선에서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가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일 유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길을 뚫고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약속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이 스스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결정하며 추진할 힘을 갖는 지방분권이야말로 정읍과 고창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선연임이 된다면 힘 있게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유 후보는 지난해 19개 국회에서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당 당헌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헌에 풀뿌리분권정당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늘 고민해왔다"며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정호 예비후보, "9군단 부지 완주군민 품으로"

국민의당 김정호 예비후보(완주 무진장·사진)는 20일 35사단 예하 108연대(옛 9군단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종합레저타운으로 조성해 완주군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 소재 35사단 예비군 대대의 완주군 봉동읍 이전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108연대는 완주군의 장기 발전에 저해가 된다"며 "108연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곳을 리조트와 공연장, 컨벤션센터, 호텔, 어드벤처시설, 힐링수련원을 갖춘 종합레저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이 완주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주시가 35사단 예하의 예비군대대를 완주군민의 품에 없이 일방적으로 완주군 봉동읍으로 이전하려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 한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임정엽 예비후보, 경선 참여 자격 부여 받아

국민의당 임정엽 국회의원 예비후보(완주진무장)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18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임정엽에게 공직후보 자격 및 경선 참여 자격 부여를 의결했다"고 했다.

당초 임 후보는 자격논란이 일었지만 중앙당이 당규 32조 2항을 개정해 후보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선거에서 당선돼 유권자의 검증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주요 골자다.

임 후보는 공직후보 자격 부여에 따라 김정호 예비후보, 이돈승 예비후보 등과 함께 경선을 치르게 됐다.

임 후보는 "개정 당규에 따라 공직후보 자격을 부여받는데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 처리된 것이 아쉽지만 최고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신광영기자·무주=전문선기자